



주간통일정세 2010-46(2010.11.08~11.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46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北김정일·정은, 조명록 빈소 조문(11/8,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이 조명록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전하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을 추모해 묵상하신 다음 혁명전우, 혁명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영구를 돌아보고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 조의를 표시하고 따듯이 위로 하셨다”고 밝힘.
- 이어 조문 동행자를 밝히면서 김정은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직)과 리영호(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호명
- 이날 조문에는 당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겸직)·김국태(당 검열위원장 겸직)·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비서 겸직)·김경희(당 부장 겸직)·강석주(내각 부총리 겸직)·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겸직)·주상성(인민보안부장 겸직)과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겸직)·최룡해·김양건·김영일·박도춘·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비서 겸직)·주규창(당 부장 겸직)·리태남(내각 부총리 겸직)·박정순(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겸직)·오극렬(국방위 부위원장 겸직)·백세봉(국방위원 겸직)·김명국·김경옥·김원홍·정명도·리병철·김영철·윤정린(당 중앙군사위원 겸직) 등이 동행

##### ● 北매체, 김정은 우상화 글 첫 게재(11/9, 우리민족끼리)

-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처음으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김정은 청년대장’이라고 부르며 우상화하는 내용의 글을 실음.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5일 ‘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익제 조평통 부위원장이 썼다는 기고문을 게재
- 오 부위원장은 A4 2장이 조금 넘는 분량의 글에서 최근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10.10) 당시 주석단에서 있던 ‘청년대장 동지’를 처음 볼 수 있었다면서 “김정은 청년대장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만장은 삼시에 감동과 충격, 기쁨과 격정으로 끓어 번졌다”고 말함.
- 그는 또 “천리해안의 예지와 해박한 식견, 비범한 군사적 지략과 상



상을 초월하는 다재다능의 실력' 등 청년대장 동지의 위인상에 대해 익히 들어왔었다"면서 "참으로 대를 이어가며 절세의 위인을 모심은 우리 민족의 행운"이라고 강변

-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이 북한 언론매체에 공개된 것은 9.28당대표자회 전날 '대장 칭호'를 받은 이후부터지만,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선전하는 글이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
- 김정은은 작년 1월 후계자에 지명된 이후 북한 내에서 '셋별 장군', '청년대장', '김 대장' 같은 호칭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당국이 그의 이상화를 위해 보급시켰다는 노래 '발걸음'에서도 실명으로 언급되지는 않음.
- 오 부위원장은 "(남한) 인터넷들에는 청년대장 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신 것을 축하하며 그분을 뵙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담은 네티즌의 글들이 연속 게재되고 있다"고 덧붙임.

#### ● 北TV, 김정은 동영상 신속 공개(11/9, 조선중앙TV)

- TV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의 조명록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방위 제1부위원장 빈소 조문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
- 김 위원장과 김정은은 조문을 했는데, 김 위원장의 활동이 하루 뒤에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은 김 위원장과 함께 조명록의 유족들과 두 손으로 악수를 하며 조의를 표시했으며 시신을 둘러보기도 했으며, 유족들은 깎뚝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임.

#### ● 北, 김정은 초상화 배포...후계 공포 수순인 듯(11/12, 자유아시아방송(RFA);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이달 초 후계자 김정은의 초상화를 당과 사법·보안기관 등의 간부들에게 배포했고 곧 주민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고 RFA가 보도
- 방송은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11월 1일 각 도당과 도 보위부 기요과(기밀문건 관리부서)에 김정은 초상화를 내려 보내 6일부터 간부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면서 "당 기관, 검찰소, 보안서에는 인민복 차림의 초상화가, 보위부에는 군복 차림의 초상화가 배포됐다"고 밝힘.
- 함경북도 청진시 소식통은 "보위부 간부들에겐 군복 차림의 초상화 외에,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과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이 담긴 초상화(사업토의상)도 지급됐다"고 말함.
- 양강도 소식통은 "일반 주민에게도 이달 중순부터 각 기관이나 기업소, 동사무소를 통해 김정은 초상화가 배포될 예정"이라면서 "김정은 초상화 배포에 앞서, 당 선전선동부 산하 문화회관, 출판물보급소, 예술선전대 등의 간부들로 구성된 '초상화 검열조'가 각 가정을 돌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의 보관 상태를 검열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앞서 9.28당대표자회 참석자들에게 김정은 초상화가 기념선물로 배포됐지만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모시지(걸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선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초상화 배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 김정일동향

- 11/ 8 김정일, 조명록 빈소 弔意 방문 및 화환 전달(11/8, 중방·중통)
  - 김영남(상임위원장),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국태(黨검열위원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黨비서), 김경희(黨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리용무(국방총 부위원장), 주상성(인민보안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룡해·김양건·김영일·박도춘·태종수·김평해(黨비서) 등 동행
- 11/ 9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등에게 「감사」전달(11/10, 중방)

#### ■ 김정은동향

- 11/ 8 김정은, 조명록 빈소 弔意 방문 및 화환 전달(11/8, 중방·중통)

#### ■ 기타 (대내 정치)

- 北, 농업부문에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 생산체계’ 적극 도입성과 자랑(11/9, 중통)
- 北, 11/10 09:00 조명록 장례식 국장으로 진행 및 애국열사능에 안장(11/10, 중TV·평방·중통)
  - 김영남, 최영림, 이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홍석형, 강석주, 리용무, 변영립,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이태남, 김락희, 박정순, 김창섭, 이하일 등 참가

## 나. 경제

### ● 최영림 北총리, 中동북 방문 마치고 귀국(11/8, 연합뉴스)

-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
-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 총리 일행은 이날 오전 다롄 경제개발구의 산업 시설을 둘러본 뒤 오후 다롄공항에서 고려항공 소속 전세기를 이용, 평양으로 향했다고 함. 최 총리 일행은 지난 1일 평양을 출발, 첫 방문지인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 도착할 때도 전세기를 이용



- 최 총리 일행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저녁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마지막 방문지인 다롄에 도착, 샤더런(夏德仁) 다롄시 서기가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해 양측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
  - 하얼빈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 동북지역 방문에 나선 최 총리 일행은 7박8일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지린(吉林)시, 랴오닝(遼寧)성의 선양(瀋陽)과 다롄 등 동북 3성 주요 도시를 모두 순회함.
  - 이들 도시는 지난 5월과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지역으로, 김 위원장이 방중 당시 밝힌 북·중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
  - 이번 북한 대표단에는 최 총리 이외에도 대외 경제 담당인 로두철 부총리와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 황학원 도시경영상 등 북한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방문단도 30여 명에 이를 만큼 이례적으로 규모가 컸음.
  - 최 총리 일행은 방중 기간 중국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인 창춘 이치(一汽)자동차 회사와 지린 농업박람회 등 동북 3성의 주요 산업 시설과 농업 연구소를 시찰함. 동북 3성의 서기들과 만나서는 북·중 경협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류와 경협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 특히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린성에서 3박4일을 머물며 창지투와 라진-청진을 잇는 ‘두만강 경협 벨트’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중국의 선진 농업과 농업 기술을 전수받는데도 큰 관심을 보임. 울여름 수해 등 혹심한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지린성에 식량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中연변, 北라선과 관광 협자 확대 추진(11/9, 연합뉴스)**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북한 라선시와 관광 협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연변주 정부는 이날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문 국장이 이끄는 연변주 대표단이 최근 북한 라선을 방문, 주요 관광시설을 시찰하고 라선시 당국자들과 관광 협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
  - 라선시 관광국은 연변과의 관광 협자가 확대되길 적극적으로 희망했으며 전력 사정과 관광객 접대 시설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하면서 라선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연변주 정부는 전함.
  - 연변주 대표단은 통관과 관광 노선 편성,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주문하면서 관광 협자 확대를 라선시에 제안
  -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가 지난해 11월 국무원 승인을 받아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북한은 창지투-라선-청진을 잇는 ‘두만강 경협 벨트’ 구축에 적극적임.



- 연변주가 북한, 러시아와 공동으로 훈춘에서 출발, 러시아 슬라반카와 하산, 북한의 두만강시와 라선시를 거쳐 훈춘으로 돌아오는 3박4일 일정의 3국 접경 관광 코스를 개발, 지난달 1일 국경절에 맞춰 운영에 들어가는 등 북·중 접경지역 관광도 활기를 띤.

#### ● 北, 전력난 심화…“하루 종일 단전 일쑤”(11/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전력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전력난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연변(延邊)에서 대북 무역을 하는 무역상들에 따르면 최근 농촌지역은 물론 라선과 청진 등 북한 북부의 대도시에도 최근 전기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함.
- 최근 라선을 다녀온 한 무역상은 “많이 공급돼야 하루 2시간 정도이고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하다”며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신기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함.
- 이 무역상은 “당국은 추수기인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탈곡기 등이 많이 가동돼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말함.
- 그는 “주민 대부분이 촛불에 의존하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손전등 등을 장만해놓고 있으며 건전지 등을 아끼기 위해 해가 지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소개
- 또 다른 무역상은 “강수량이 많아 수력발전이 원활했던 여름에는 그나마 전기 공급이 좋았던 편”이라며 “지난달부터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함.
- 그는 “TV가 있는 집도 별로 없지만 있어도 시청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며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설명
- 북한은 전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나 탄광 채굴 등 기간산업까지 차질을 빚자 지난해 7월 김영일 당시 내각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전력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부터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무연탄 수출을 전면 금지함.
- 북한 당국은 잦은 정전과 전압 변동으로 컴퓨터 등 전자기기 고장이 빈발하자 지난 7월 ‘정전시간 사전 통보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함.

#### ● 北으로 수출되는 피아노·벤츠·요트 적발(11/11, 마이니치신문)

- 세계 각국이 핵 실험 등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는 피아노, 자동차, 요트 등을 적발했다고 신문이 보도
- 이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북한 제재와 관련한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피아노 36대, 고급요트 2정, 벤츠 자동차 4대가 적발됐다고 전함.
- 이들 품목은 유엔의 결의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09년 5월 약 14억6천만엔 상당의 요트 2척을 북한에 수출하려한 오스트리아 회사를 적발함.
- 또 오스트리아는 2007년 12월 1천830만엔 상당의 미국제 피아노 2대의 북한 수출을 적발했고, 일본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피아노 34대와 벤츠 4대를 수출하려했던 업자를 체포함.

### ● 北, 이례적 中조선족 초청 투자 설명회(11/11, 연합뉴스)

- 최근 들어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북한이 지난달 중국 내 조선족 기업인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
- 중국의 조선족 기업인들에 따르면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앞둔 지난달 8~15일 중국의 조선족 기업인 30여 명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함.
- 북한의 초청을 받은 조선족 기업인들은 일주일간 평양에 머물며 아리랑,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고 금강산을 관광한 뒤 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개최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함. 이번 조선족 기업인 체류 경비는 모두 북한 당국이 부담함.
- 북한이 체류 비용 전액을 대며 조선족 기업인들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방북한 조선족 기업인들을 상대로 북한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대북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 방북했던 한 조선족 기업인은 “외자 유치 부서에서 나와 만나질 동안 북한 투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며 “특히 전력산업과 도로나 철도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했다”고 전함.
-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조선족 기업인들이 “대북 투자를 한 중국 기업 가운데 돈을 번 경우가 거의 없고 절차가 복잡하고 통제가 너무 심해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자 “실태를 조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북한 투자와 관련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함.
- 조선족 기업인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래 체류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조선족 기업인들을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자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함.

#### ■ 기타 (대내 경제)

- 北 평양화장품공장, 염색크림·세척크림·쑥머리 물비누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새로 개발(11/8, 중통)



## 다. 군사

- **北, 핵·화학전 대비 민방위훈련 강화(1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 간부의 전언을 인용, “10월 1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핵·화학전 대비훈련을 강화할 것에 대한 지시문을 내려보냈고, 당 민방위부에서는 훈련요강을 제작해 배포했다”면서 “12월 1일 시작되는 동계훈련부터 새로운 훈련요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당 중앙군사위 지시문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핵·화학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춰 공포감을 없애고, 개인보호 장비와 대피시설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
  - 개인 보호장비로는 화학무기 방어용 비닐옷, 방사선 회피용 고무옷, 고무장화, 버선, 장갑, 솜을 넣은 마스크, 해독을 위한 구운 진흙, 숯가루 등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짐.
  - 또 양강도 혜산시의 소식통은 이 방송에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된 새 훈련요강에는 핵·화학전에 대한 상식과 대처방법, 실전훈련 제강(기본체계를 적은 글) 등이 담겨 있다”면서 “각 공장, 기업소의 노농적위대와 고등중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는 보름간의 정기훈련 기간에 핵·화학전 대비훈련 4일, 전문교육 2일을 받게 된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정기훈련 일정의 절반 가까이를 핵·화학전 대비훈련에 할애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식교육 4시간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변화”라고 덧붙임.
  - RFA는 복수의 북한 내 소식통들을 인용, “최근 주민대피용 갱도 입구를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50cm 두께의 출입문과 갱도 앞 방호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당 민방위부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고 한다”고 전함.

### ■ 기타 (대내 군사)

- 최영림·전병호·변영립·이을설·김철만 등 黨·政 책임일꾼들,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 일꾼·조선인민내무군 장병 등, 조명록 빈소 조의 방문(11/8, 중통·중방)

## 라. 사회·문화

- **北, ‘영웅 띄우기’로 충성심 고취(1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우리 민족끼리)**
  - 북한이 전사자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구하고 사망한 사람들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 주민들이 이들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



- ‘영웅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영웅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모교출신 ‘영웅’의 이름을 따 학교명을 아예 개명하는 것임.
- 가장 최근의 사례로 북한은 지난달 15일 평양축전중학교를 ‘김주혁중학교’로 개명
  - 통신은 지난달 16일 “평양축전중학교가 공화국 영웅 김주혁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그의 반신상이 학교에 세워졌다”며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김주혁은 군사정치훈련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지난해 11월 우리(북)측 영해에 기어든 적함들과의 전투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용감하게 싸웠다”고 밝힘.
  - ‘영웅’ 이름을 딴 학교개명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지난 1990년 11월 위협에 처한 병사들을 구하다가 21세에 사망한 인민군 소대장 출신 김광철을 ‘90년대 첫 영웅’으로 내세워 그의 모교인 평안북도 구장군 용문고등학교를 ‘김광철고등학교’로 명명함.
  - 이후 2009년 4월에는 함경남도 요덕군 완산중학교를 ‘한계렬중학교’, 2007년 12월에는 평양 원신중학교를 ‘유경화중학교’, 2005년 9월에는 평양미산소학교를 ‘유향림소학교’로 각각 개명
  - 한계렬은 6.25전쟁 당시 전사자이며, 유경화와 유향림은 각각 18살과 9살 당시에 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구하고 사망한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1일 “비범한 기질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영웅이 될 수 있다”면서 “인민대중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대의 영웅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

#### ● 北, 주민들에 군량미 할당 중단(11/8,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량미를 걷어오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소식지는 북한 노동당 중앙당이 지난달 30일 “군량미 사업과 군대 원호 고기 부담(군대에 보낼 고기를 감자로 계산해 바치는 것)을 올해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뒤인 11월 1일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 같은 내용이 통보됐다고 밝힘.
- 작년 평성시와 순천시에서는 농작물 수확량 가운데 65%를 군량미로 거둬 농민들은 평균 5개월 분량만 배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 당 대표자회 이후에도 생활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실망하고 있던 주민들은 군량미 사업 중단 발표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단체는 전함.
- 다수의 농민은 “해마다 군량미와 고기지원비를 바치고 나면 온 식구가 3개월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빠져나가곤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 달 식량을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기뻐하고 있다고 소개



- 량강도 해산시의 최인호(가명)씨는 “올해 농사가 안 돼 수확량이 떨어지긴 상태에서 군량미 확보를 우선으로 내세우면 주민들이 살아갈 길이 도저히 안 보여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며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

● **오라스콤,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급증”(11/9, AP통신)**

- 북한과 합작회사 ‘고려링크’를 세워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최근 1년간 4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 오라스콤은 지난 7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올 3분기 말 현재 고려링크 가입자 수가 30만1천199명으로 1년 전(6만9천명)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힘.
- 아울러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이 평양을 포함한 12개 주요 도시와 42개 소도시, 22곳의 고속도로 및 철도 구간 등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임.
-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됐으며 올해 시작된 음성 및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개시한 영상 통화 서비스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오라스콤은 평양에 신규 점포 두 곳을 개설하고, 지방에 점포 한 곳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직간접적인 판매 창구가 8개 도시 26개소로 늘었다고 덧붙임.

● **北선수단, 中광저우로 출발(11/9, 조선중앙통신)**

-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이 이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통신이 전함.
- 통신은 “정인철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선수단이 이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전했으나 선수단 규모와 출전 종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북한 선수단은 10일 오후 3시 카타르와 합동 입촌식을 할 예정
- 북한은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종목에 199명이 참가 신청했지만 지난 6일 체조가 국제체조연맹(FIG)으로부터 2년간 출전금지 처분을 당해 19개 종목 188명으로 감소

● **北, 축구 한국전 승리 신속 보도(11/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 매체들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예선전 첫판에서 북한팀이 한국에 1-0으로 승리한 소식을 신속히 전함.
- 통신은 8일 중국 광저우 웨슈산 스타디움에서 남자축구 조별리그 C조 1차전으로 맞붙은 한국 대 북한 경기가 치러진 후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11시 6분 보도를 통해 “조선팀(북한)이 남조선팀을 1대 0으로 타승(打勝, 승리)했다”고 보도
- 통신이 북한 팀의 경기 결과를 당일 몇 시간 만에 전한 것은 이례적임.



- 방송도 이날 오전 6시 보도를 통해 아시안게임 첫 남북 대결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면서, 경기 전반 36분 북한 선수 리광천의 헤딩 결승골에 대해 “머리받기로 통쾌하게 골문에 넣었다”고 소개

### ● 北, 외국인 전용 휴대전화망 운용(11/10, 미국의 소리(VOA))

- 북한 당국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 휴대전화 통신망을 따로 운용하고 있다고 방송이 보도
- 이 방송은 평양에 거주하는 러시아 유학생이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용, “북한 당국이 ‘선넷’(Sun Net)이라는 이름의 외국인 전용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북한 주민들이 쓰는 ‘고려링크’ 통신망과 연결이 안되고, 요금과 전화번호 체계도 다르다”고 전함.
- 또 북한에서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쓰려면 가입비로 미화 1천 달러를 내고 전화기 구입비로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방송은 밝힘.
- NK지식인연대의 김홍광 대표는 VOA에 “현재 북한에는 2개의 이동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과거 태국 통신회사 ‘록슬리’가 운용하던 것을 외국인용으로 하고 일반 주민은 이집트 ‘오라스콤’의 고려링크를 쓴다”면서 “북한처럼 통신 시장도 작고 외국인도 많지 않은 곳에서 통신망을 2개나 운용하는 것은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함.
- 그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내부 소식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꺼려 외국인과 일반 주민들이 서로 전화 연결이 안 되게끔 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내국인 감청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위부 산하 16국 산하에 외국인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다”고 덧붙임.

### ● 김일성대 수영장에 미제 장비(11/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교의 교내 수영장에 ‘적대적 관계’인 미국산 장비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RFA가 보도
- 북한 관련 인터넷매체(nknews.org)를 운영하는 미국인 태드 파렐씨는 RFA에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는데 김일성대 수영장에 설치된 터치패드(출발·도착시간 기록장치)와 확성기가 미국산이었다”면서 “북한 최고 대학의 시설에 미국산 표식이 그대로 붙은 제품이 사용돼 놀라웠다”고 밝힘.
- 파렐씨에 따르면 이 수영장의 터치패드는 미국 ‘콜로라도 타임 시스템(Colorado Time Systems)’사 제품이고, 오하이오 주 ‘포제이(4Jay)’사 제품인 확성기에는 ‘오하이오 주 데이톤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제품’(Made with pride in Dayton, Ohio)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 ‘콜로라도 타임 시스템’의 국제판매 담당자는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에 거래처가 있지만 이 회사는 북한 측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北평양시민, 당창건 행사로 고초(11/10, 좋은벗들)

- 단체는 북한의 평양시민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10.10)를 치르기 위해 행사 전부터 각종 모임과 청소 등에 동원되는 고초를 겪었다고 전함.
- 이 단체는 온라인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평양 시민이 9.28당 대표자회에 이어 당 창건 행사를 치른다고 각종 모임과 회의, 청소와 마을 가꾸기에 동원됐다"면서 "주부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6시에 잔디를 깎거나 연석(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하얗게 닦아야 했고,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수시로 거리 청소에 나서야 했다"고 말함.
- 이어 "행사 참가자의 고생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당 창건 행사 같은 큰 행사에는 '광장대열팀', '춤대열팀', '놀이군중팀' 3부류로 나눠 과업을 내린다"고 말함.
- 이 단체에 따르면 이중 신세가 그나마 나은 편인 '놀이군중팀'은 술과 고기 등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 나가 음식을 먹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되는 데 비해,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춤대열팀'은 행사 기간에 선정된 구역에 나가 춤을 추려고 매일 퇴근 후 춤 연습을 해야만 함.
- 가장 힘든 팀은 '광장대열팀'으로 올해 행사 분위기가 어느 해보다 엄숙한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외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령과 신호에 따라 깃발과 꽃술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들어야 하는 관계로, 작은 엇박자를 낸 한 참가자가 긴장을 못 이겨 기절했을 정도였다고 전함.
- 단체는 "지난 2개월 남짓 못 먹어가며 고생해서 연습한 것이 한 명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자 다른 행사 참가자들이 몹시 실망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서 "평양시 전체가 흥역을 앓듯이 행사를 치르고 지금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고 덧붙임.

● 北, 中친지방문 재허용...“도움 많이받고 오라”지시(11/10, 데일리NK)

- 매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중국 친지 방문을 두 달여 만에 다시 허용하면서 중국의 친지한테 돈이나 물품을 많이 받아오도록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당대표자회(9.28)와 노동당 창건 기념일(10.10)을 앞두고 8월부터 금지됐던 중국 여행이 이달 5일부터 친지방문에 한해 다시 허용됐다”면서 “각 지역의 당 선전부가 중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친척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조(도움)를 받아 오라’, ‘들어올 때 돈과 물건을 제한하지 앓을 테니 마음대로 가져오라’는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중국에 가면) ‘지역 탁아소, 유치원, 학교, 편의봉사시설 등에 필요한 물품을 각자 마련해오는 것이 도리’라는 내용도 교육에 들어 있었다”면서 “하지만 ‘남조선 사람을 만나거나 남조선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안된다’는 내용은 여전히 강조됐다”고 전함.





대화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

■ 기타 (대외 일반)

- 訪中 최영림 내각총리 일행, 요녕성 심양시와 대련시 여러 곳(심양송풍기유한공사, 대련기관차생산공사, 대련빙상그룹, 요녕어업그룹, 북릉공원 등) 참관(11/8, 중통)
- 駐北 외교단 및 무관단, 조명록 빈소 조의 방문(11/9, 중방)
- 김영남,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시장 일행과 담화 (11/8, 중통)
- 중국 黨중앙총과 중앙군사총, 조명록(北 국방총 제1부위원장) 사망 관련 北 黨중앙총 및 국방총에 弔電 전달(11/9, 중통·중방)
- 유엔총회 제65차 회의 3위원회에서 일본 대표의 ‘납치문제 미해결’ 등 발언은 “납치문제를 정치 흥정물로 내세우면서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간악한 행위”라고 再次 비난(11/9, 중통·노동신문)
- 인도네시아 지진·화산폭발과 중국·베트남 등 폭우, 오스트리아 폭설 등 세계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복구노력과 국제기구들의 원조물자 제공 등 활동 소개(11/9, 중방)
- 중국·러시아·이집트 등 재외 北공관들에서 北 국방총 검열단 진상공개장(1)이 발표된 것과 관련 11/3-5 기자회견 진행(11/10, 중통·중방)
- 美 군축협회(ACA) 보고서의 ‘北을 핵 및 미사일기술 전파 및 위험국’ 언급 관련 “우리(北)의 핵억제력 약화와 국제무대 고립을 노린 비열한 술책”으로 비난하며 “국제적 핵위협과 핵전파의 장본인은 美國”이라고 강변(11/10,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기타 (6자회담(북핵))

- 外通部長관의 6자회담 관련 對北발언(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핵시설동결선언 등)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北)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며 “反北 대결소동 철회 및 南北대화에 성실히 응해 나올 것”을 주장(11/10, 중통·노동신문·중방)

3. 대남정세

- 北매체, G20 北도발 대비에 “치졸한 광대극”(11/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청와대가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남조선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진보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



화하고 모략적인 반공화국(북한) 대결소동을 합리화해보려는 치졸한 광대극”이라고 비난

- 매체는 “최근 남조선 당국이 서울에서 열리게 될 그 무슨 20개국 수뇌자들의 회의란 것을 앞두고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청와대가 지난 4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G20정상회의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북한과 반서방 세력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과 세계 각국 정상들의 경호 안전 대책,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 등을 논의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
- 이어 “오늘날 이 땅에서 동족과 대결하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온갖 모략적인 도발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는 것도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의 ‘도발’을 떠들기 전에 저들의 도발적이고 대결적인 자세와 입장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함.

● 北, G20 개막일에 “서방 원조 경계해야”(11/1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날 북한은 ‘선군(先軍)’과 ‘주체’ 정신을 강조하며 ‘서방 원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신문은 이날 ‘서방의 원조외교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에 경제적 약속과 약탈의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면서 “발전도상 나라들이 사회경제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는 방도는 외세 의존심을 버리고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해,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주장
- 이 신문은 또 ‘주체성 확립은 자주통일 위업의 생명선’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조국통일 위업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조성된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현재의 남조선 당국자들은 집권하자마자 미국과 동맹관계 회복을 떠들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심화시켰다”고 비난
-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선군은 자주이며 민족의 존엄이고 위용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족의 생명인 자주가 없으면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노예가 된다”면서 “선군은 우리 인민에게 자주권을 되찾아줬고 자주적 인민의 존엄과 위용을 안겨줬다”고 밝힘.
- 한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지금까지 서울 G20 회의에 대해 ‘11월에 열리게 될 국제회의’로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행사 규모나 일정, 의제 등은 한 줄도 소개하지 않음.

● 北, “19일 개성서 금강산관광 회담 갖자”(11/11, 연합뉴스)

-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당국 간 회담을 오는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함.



-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밝힘.
  - 북측은 앞서 지난달 2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는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갖자”고 촉구
  - 북측의 회담 개최 요구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달 12일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북측에 전함.
  - 통일부는 이날 북측의 회담 개최 촉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함.
- 北, “관광재개 회담 열리면 적십자회담에도 유리”(11/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면 적십자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전함.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남측의 통일부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정상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하므로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간 실무회담을 19일 개성에서 갖자”며 “관광재개 회담이 열리면 25일에 진행되는 북남 적십자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함.
  - 통신은 “통지문은 우리(북)측이 지난 10월 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관광재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데 대해 남측이 ‘검토’요, ‘추후 통보’요 하면서 수 십일이 지난 오늘까지 답변을 끌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 기타 (대남)

- 南 당국의 ‘PSI 운영전문가그룹’ 정식 가입 및 美주도 ‘미사일방위 체계’ 가담 시사는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北)를 위협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11/8, 중통·노동신문)
- 南北 대화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북과 남이 대화에 임하는 입장과 자세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南 당국의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위한 입장전환 持續 주장(11/8, 중통·노동신문·평방)
- 統一部長官 및 합참의장의 對北발언(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발전 불가능, 지역의 최대불안정 요인은 北 핵문제)을 “권력 유지를 위한 북침핵전쟁 도발책동”으로 持續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11/9, 평방)
- 南 당국의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가입 및 美주도 ‘미사일방위



체계'(MD) 협력 강화 시사는 “북남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고의적인 도발책동”이라고 再次 비난과 “자위적 조치로 강력대응” 위협(11/9, 중통·민주조선)

- 南 당국의 지난 서울수복기념행사, 對北 ‘주적’ 표현 및 韓美 PSI·공중전훈련 진행 등을 거론하며 “6.15·10.4선언 정신에 배치되지 우리(北)와 계속 엮서는 대결기도”라고 持續 비난 및 對北정책 전환 주장(11/9, 중방)
- 北, 남측의 ‘G-20 정상회의 대비 군사대비태세’ 관련 “통치위기에 몰린 자들의 단발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하며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 있다”고 강변(11/11, 민주조선)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리 대통령 “北과 접촉 활성화해야”(11/12)

-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서울을 방문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접촉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2일 보도했음. 통신은 크렘린 소식통을 인용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지속하고 6자회담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접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다른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그는 앞서 10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야망이 동북아 및 러시아 동쪽 국경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 러시아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 실험장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불과 100여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는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틀 내에서 정치·외교적 방법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우리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러시아도 다른 6자회담 참여국과 마찬가지로 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 ● < G20 > 한·미·중·러 ‘북핵 교감’(11/12)

- 교착의 긴 터널을 지나온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음. 회담재개 수순과 조건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온 5자가 연쇄 양자접촉을 거치며 느슨하나마 포괄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내는 분위기이기 때문임. 6자회담을 서둘러 재개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을 꾀하자는 쪽으로 5자 정상간에 ‘공통의 이해’가 구축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임.
- 한 외교소식통은 12일 “거칠게 말하면 서울(남북대화)을 거쳐 워싱턴(북미대화)으로 가거나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야 한는데 일정한 교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G20을 계기로 드러난 중·러의 태도변화에서 분명히 읽히고 있다. 포스트 천안함 국면에서 회담



- 조기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중.러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관측임.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 남북관계 개선은 중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일관되게 견지해온 화두이지만 현 국면에서는 우리측의 ‘선(先) 남북관계 개선-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에 일정한 동의의사를 표한 것으로 풀이됨.
  - 지난 10일 열린 한.러 정상회담은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합의를 끌어냈다. 외교소식통은 “러시아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회담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게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회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차원의 이 같은 공감대 확인은 천안함 이후 사실상 무너졌던 5자협의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며 6자회담 재개 논의에 흐름에 탄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문제는 총론상의 컨센서스에도 불구하고 각론상으로는 각국의 시각차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점임. 회담재개의 수순과 조건을 놓고 서로의 ‘방점’이 달라 이견조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얘기임.
  - 우선 우리 정부는 ‘선 남북관계 개선-후 6자회담 재개’라는 대응기조를 설정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훨씬 엄격해 보임. 남북관계 개선에는 천안함 문제의 종결이, 6자회담 재개에는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어 일종의 ‘이중 빗장’을 걸어놓은 듯하다는 분석이 나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임.
  -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와 ‘분리’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준비가 됐다는 증거가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임.
  -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여건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음. 분위기가 일정정도 조성되면 곧바로 ‘천안함 페이지’를 넘기고 6자회담 재개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임.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G20 이후 재가동될 5자 협의 프로세스에 상당



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조건과 수순에 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구상임.

### ● 오바마 “北비핵화 준비 증거보이면 6자회담 재개”(11/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준비가 됐다는 증거가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북한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나와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6자 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봐야 한다. 이런 대화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북한이) 그냥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이 대통령과 나는 완전한 합의를 갖고 지난 몇 년간 함께 움직였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며 “북한이 인접국에게 호전적 행동을 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발적 행동 등을 하다면 세계 사회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돼 발전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음.
- 또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선택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 오바마 “北 핵추구 아닌 다른 길 있다”(11/11)

- 한국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북한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내부 안정과 국제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미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더 큰 고립과 불안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은 결코 대한(對韓) 방위공약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며, 한미 동맹은 과거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변화를 거부하고 주민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고 있다고 상기한 뒤, “이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와 천안함 사건을 포함해 대결과 도발의 길을 선택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또 다른 길이 북한에는 열려 있다”면서 “만일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사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빈곤이 아닌 성장의 기회, (내부적인) 안정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미래를 북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베테랑스 데이(재향군인의 날)’와 겹친 이날 연설에서 60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들의 노고를 치하했음.

#### ● <北, 핵문제 ‘투트랙’ 전술 구사하나>(11/11)

- 한반도 전문가인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이달 초 북한의 핵시설이 위치한 영변에서 신축공사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림.
- 프리처드 소장은 10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영변 지역에 묵었는데 반드시 핵시설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건축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외교소식통이 11일 전했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위협이라는 두 가지 전술을 병행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임.
- 비록 프리처드 소장의 요구에 따라 영변 방문이 이뤄졌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신축공사 현장을 보여준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임. 이에 따라 북한이 프리처드 소장 등 최근 미국의 민간 외교전문가들을 잇따라 초청하는 것은 핵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재차 감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됨.
- 북한은 그동안 핵협상에서 미국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이 어려울 때는 민간인을 초청한 뒤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음.
- 북한은 프리처드 소장에게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5MW 원자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6자회담에 나올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기다리겠다”고 언급했음. 북한이 최근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적십자실무회담 등을 통해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이 이처럼 핵문제를 놓고 대화와 위협의 카드를 동시에 쓰는 것은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형적인 전술로 읽힘. 이에 따라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당장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음. 북한이 비핵화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의 요구대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공산은 크지 않기 때문임.



- 외교소식통은 “최근 영변의 신축공사 등을 살펴보면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더구나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사건을 남측에 의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음.

#### ● 美프리처드 “北, 워싱턴 오려면 서울 거쳐야”(11/10)

- 북한 방문을 마치고 방한한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0일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워싱턴으로 오려면 서울을 거쳐야만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음.
-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림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엄종식 통일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했던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엄 차관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리처드 소장은 또 이날 워싱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북핵 당국자들을 만나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앞서 지난 2~6일 개인자격으로 방북해 북한 외무성 당국자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 등에 대한 북측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음.

#### ● <정부, 북핵전문가 IAEA 파견 추진>(11/9)

- 정부가 내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핵문제 전문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됨.
-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9일 “내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과 검증문제에 대비하려면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내년중 IAEA의 북핵 유관파트로 외교부 북핵 전문가의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 정부가 제시한 그랜드 바겐 구상에 따라 포괄적인 타결이 이뤄질 경우 관련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며 “IAEA가 보유중인 핵사찰과 검증경험을 습득하고 외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CFE(Cost Free Expert) 파견관련 예산 3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E 파견은 회원국의 경비부담으로 직원을 IAEA 사무국에 파견해 공동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차출된 7명을 IAEA에 파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직원은 주로 원자력 에너지와 핵안전 등 핵 일반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북핵문제와 직접 연관성을 갖는 안전조치부 등 정책 부서에는 나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는 파견계획이 확정될 경우 중견간부급 이상에서 파견자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음. 한편 외교부는 내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북핵 태스크포스 운영을 강화할 방침임.

#### ● IAEA 총장, 북핵 6자회담 재개 촉구(11/9)

- 아마노 유키야(天野之)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핵 6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음.
- 그는 북한이 IAEA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음.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유엔 제재를 초래했으며 2002년 12월 이후 IAEA의 안전 관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 美 “건설적이라고 느끼는 시점서 6자재개”(11/9)

- 미국은 8일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우리는 다자회담이 건설적이라고 느껴질 때 이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즈 고테필러 군축.검증담당 차관보가 ‘지금 이 6자회담이 재개될 시점’이라고 언급한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음.
- 이에 앞서 고테필러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영변 핵시설 주변의 움직임 등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하는 노력을 재개해야 할 때”라고 밝혔음.
- 워싱턴 소식통은 “고테필러 차관보의 언급에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변화된 자세를 보이느냐가 핵심이며, 그동안 한미 양국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대로 남북간의 접촉이 미북접촉보다는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나. 미·북 관계

#### ● 오바마 “北, 의무 다하면 경제적 지원 준비”(11/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은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생각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남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경심을 얻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줄 준비가 돼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안보는 한국의 미래와 경제 기적을 이루게 했다”면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北, 美 외교전문가 초청 공세”(11/9)

-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외교전문가들에게 초청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워싱턴발로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가를 잇따라 초청해 경제개혁 방침 등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음. 이는 북한이 미국 정부와의 공식 대화 창구가 막히자 민간인을 중개로 버락 오바마 정권에 경제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이달 초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씨, 지난 9월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UC 샌디에이고)의 수전 셔크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 소장 등 북한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초청, 북한의 고관과 회담하는 자리를 제공했음. 북한은 이들 미국 전문가에게 중국의 협력을 통해 공업과 농업의 근대화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음.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달러 등의 화폐 위조 등 불법 비즈니스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임.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프리처드씨와 셔크 소장은 과거 미 정부에서 북한정책을 담당한 바 있어 북한은 이들에게 현 오바마 정권에 영향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다. 중·북 관계

##### ● “후진타오, 방중 北지도자에 남북관계 중요성 강조”(11/11)

-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중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음.
- 후 주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배석했던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후 주석은 북한 지도자의 방중때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후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됨.



- 후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보고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북한에 중국의 과거 발전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훌륭한 모델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하 따라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음.
-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북한과 가진 특수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과거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래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후 주석은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바뀐 이후 상당히 관계가 가까워지고 밀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만족한다”고 밝혔음.

#### ● 北,中친지방문 재허용·“도움 많이받고 오라” 지시(11/10)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중국 친지 방문을 두 달여만에 다시 허용하면서 중국의 친지한테 돈이나 물품을 많이 받아오도록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당대표자회(9.28)와 노동당 창건 기념일(10.10)을 앞두고 8월부터 금지됐던 중국 여행이 이달 5일부터 친지방문에 한해 다시 허용됐다”면서 “각 지역의 당 선전부가 중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친척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조(도움)를 받아 오라’, ‘들어올 때 돈과 물건을 제한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가져오라’는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또 “(중국에 가면) ‘지역 탁아소, 유치원, 학교, 편의봉사 시설 등에 필요한 물품을 각자 마련해오는 것이 도리’라는 내용도 교육에 들어 있었다”면서 “하지만 ‘남조선 사람을 만나거나 남조선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안된다’는 내용은 여전히 강조됐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 종전에는 해외 여행자 교육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맡아 남조선 주민 접촉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반입금지 품목도 고지했으나, 이번 중국 친지방문에 대해서는 당 선전부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에 가려면 거주지 보위부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렸는데 요즘 중국의 친지를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는 15~20일이면 출국허가가 떨어진다”면서 “당국은 중국의 친지방문 여행을 다시 허용한 것이 ‘청년동지(김정은 지칭)의 배려’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 ● <北근로자 고용, 北中경협 새로운 모델>(11/10)

- 북한 근로자 고용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로 떠오르고 있음. 중국으로서는 인건비가 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 역시 유향 노동력을 가동하면서 손쉽게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임.
- 두만강 유역 개발 사업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의 관문으로 부상한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의 한 의류업체가 북한 근로자 500명을 고용키로 하고 중국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훈춘의 소식통들이 10일 전했다. 의류를 제조, 중동으로 수출하는 이 업체는 개혁 개방 이후 훈춘의 노동 인력이 남부 연안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겪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북한 근로자 고용을 떠올렸음. 이 업체 이외에도 훈춘의 5-6개 의류업체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추진 중이며 그 규모는 모두 1천500여 명에 이룸.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원정리와 마주하는 훈춘은 중국이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관광 합작 확대 등 북한과의 경협에 적극적임.
- 두만강 상류에 자리 잡은 투먼(圖們)도 접경인 북한 남양의 근로자 고용을 추진 중임. 투먼시 경제개발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북중합자회사인 연변(延邊)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가 최근 북한 무역성, 함경북도 해운구락부,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근로자의 파견 근무를 위한 노무 협약을 체결했음.
- 투먼시는 우선 100명의 북한 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음. 북한 근로자들은 투먼 경제개발구 내에 건설된 '북한공업단지'의 공장에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됨.
-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丹東)에서도 북한 근로자 고용이 활기를 띠고 있음. 올 들어 이미 수백여 명의 북한 봉제 기술자들이 단둥의 의류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과 선양에는 수년 전부터 줄잡아 500여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중국을 오가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지난달 18일 북한 선봉기술총회사 김동식 사장이 인솔하는 북한 과학기술사업 대표단이 단둥을 방문한 데 이어 북한 국가과학원 대표단도 지난 1일 단둥에서 열린 제1회 북중 과학기술 교류협의회에 참석해 소프트웨어 단지 개발, IT인력 양성과 함께 북한 근로자 인력 파견에 합의했음.
- 중국 기업들의 북한 근로자 고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부터 선양(瀋陽)과 단둥, 잉커우(營口) 등 랴오닝 지역 의류업체들이 대거 북한 봉제 인력을 고용했었음. 당시 랴오닝에 진출한 북한 근로자가 300여 명에 이를 만큼 활기를 띠었으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 당국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 북한 인력 고용이 중단됐음. 그러다 올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협이 모색되면



- 서 중국 기업들의 북한 근로자 고용도 재개되고 있음.
- 라오닝의 한 대북 전문가는 “올 들어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값싼 북한 노동력에 중국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대규모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북중 경협 의 초보적 모델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이 전문가는 그러나 “국제사회에 변칙적인 대북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 정부가 북한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단둥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교민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의 위탁 가공을 맡아왔기 때문에 신의주 일대에 우수한 봉제 기술자들이 많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대북 교역 중단 조치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된 봉제 기술자들의 중국 진출을 북한 당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음.

#### ● <최영립訪中, 北中경협 어떻게 전개되나>(11/8)

- 최영립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1일부터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물꼬가 트인 북중 경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됨. 북중 양측은 최 총리의 방중 기간 경협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중 경협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북중 경협과 관련 가장 주목받는 것은 ‘두만강 경협 벨트’ 구축임. 창지투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중국은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동해 항로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라진항과 청진항을 통하는 해상 항로 확보에 큰 공을 들여왔음.
- 중국은 라진과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데 이어 창지투 관문인 훈춘(琿春)에서 북한 원정리-라진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을 북한에 약속했으며 투먼(圖們)-북한 남양-청진 구간 철도와 투먼-남양-두만강시-러시아 하싼 구간 철도 보수 계획도 창지투 개발 계획에 포함했음. 최근에는 훈춘-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 건립 구상도 흘러나오고 있음.
- 투먼-청진 구간 철도는 중국이 나서서 이미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 구간을 운행할 컨테이너 열차도 제작하고 있음. 라진이나 청진항을 이용한 해상 항로 건설을 북한보다 중국이 더 다급하게 여긴다는 얘기임.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중 당시 합의하고도 1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중국이 소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임.
- 화폐 개혁 이후 고조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라선특구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 ‘북한의 선전’으로 삼으려는 북한으로서도 창지투-라진-청진을 잇는 두만강 경협 벨트는 매력적임. 중국이 적극적인 만큼 ‘저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최 총리 일행



- 이 이번 방중 기간 지린성에서만 3박4일을 묵으며 장기 체류한 이유도 창지투-라진-청진 경협 벨트 구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
- 따라서 최 총리 일행의 방중 기간 북중 양측은 라진항과 청진항 항로의 조기 개통을 놓고 집중 협의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부두 사용권 확보 대가로 중국이 개설을 약속한 원정리-라진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주력했을 가능성이 큼. 북중 양측 모두 라진항 항로 개통이 늦춰질 경우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양측은 또 투먼-남양-청진 루트의 조기 개통과 더불어 중국이 구상하는 투먼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양국 민간 교역 확대를 위해 투먼시가 지난달 개설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호시무역시장이 활성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또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임금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투먼 공장 파견에 대해서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됨.
  - 최 총리 일행은 랴오닝성에서는 단둥(丹東)을 거점으로 한 IT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짐. 이미 단둥과 선양(瀋陽)에는 수백 명의 IT기술자들이 유입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IT 인력의 추가 파견과 기술 합작을 중국에 제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임.
  - 신압록강대교의 조기 건설과 압록강의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의 자유무역지구 개발 방안 역시 논의됐겠지만 양측 모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아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 최 총리 일행의 첫 방문지인 하얼빈은 지난달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지리적으로 지린이나 랴오닝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조만간 실질적인 경협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중 경협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북한의 자세 전환과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게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임.
  - 북중 경협과 관련 중국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간의 협력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려면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임. 북한에 투자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수익은 물론 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대북 투자나 북중 경협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임.

## 라. 기 타

### ● “北으로 수출되는 피아노·벤츠·요트 적발”(11/11)

- 세계 각국이 핵 실험 등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는 피아노, 자동차, 요트 등을 적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북한 제재와 관련한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피아노 36대, 고급요트 2정, 벤츠 자동차 4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들 품목은 유엔의 결의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09년 5월 약 14억6천만엔 상당의 요트 2척을 북한에 수출하려한 오스트리아 회사를 적발했음. 또 오스트리아는 2007년 12월 1천830만엔 상당의 미국제 피아노 2대의 북한 수출을 적발했고, 일본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피아노 34대와 벤츠 4대를 수출하려했던 업자를 체포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FTA>아쉬움 속 2차협약에 기대감(11/11)

- 외교통상부는 11일 진통을 거듭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음. 그러면서도 한미 양측이 주요20개국(G20) 회의 이후에 2차 협의를 갖기로 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에는 꼭 타결되길 기대하는 모습이었음.
- 외교통상부는 이날 낮 한미 정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FTA 합의 실패, 계속 협의’ 방침을 선언하자 그간 협의과정이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설명자료도 생략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음. 당국자들은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논의내용 등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굳게 입을 닫았음.
- 다만 이들은 협의가 결렬된 게 아니라 다시 논의를 벌이기로 한 만큼 차분히 2단계 협의를 준비해 다음엔 한미 양국에도 모두 ‘윈-윈’이 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실무협의를 끝낸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추가 논의를 위한 불씨를 살려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협의 시한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음.
-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쇠고기 문제를 놓고 양측이 크게 대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추가 협의에서도 양측이 쇠고기 문제 등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걷는다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며 벌써부터 향후 해법찾기를 우려하기도 했음.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았던 것 같



다”며 “미국도 자국 의회의 눈치를 보는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었을 테고 우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 ● <한미 정상회담, FTA 논의로 예정시간 ‘홀쩍’>(11/11)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 회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의로 예정된 시간을 2배 이상 넘기며 진행됐음.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일 청와대에서 정상 회담과 오찬,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했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 특히 전날까지 양국 통상대표들이 한미FTA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정상 회담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따라 이목이 집중됐었음. 배석자 역시 한미FTA 담당자들로 채웠음. 우리나라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음.
- 원래 회담은 정오 15분에 시작해 30분간 예정돼 있었으나 FTA 등을 논의하면서 오후 1시30분까지 75분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점심 시간도 줄었고, 공동 기자회견도 10여분 가량 늦게 시작됐음.
- 점심 메뉴로는 미국산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등이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음. 이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등을 놓고 FTA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음.
- 막판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두 정상은 모두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FTA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음.
- 양국 정상 간에는 또 기후 변화 및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깊은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는 등의 우리나라 노력도 설명했다.
- 비록 한미FTA는 서로 이견을 보였으나 양국간의 전통적 우의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했음. 특히 올해가 6.25 전쟁 발발 60년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서 전쟁 기간 한국을 위해서 싸워준 미국민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동맹관계를 확인한다”고 화답했음.

### ● <한미정상, FTA 이견속 양국동맹 재확인>(11/11)

- 서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 계기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이른바 ‘양대 현안’에서 희비가 엇갈렸음.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결국 추가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반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함을 재확인했음.

- 한미 FTA의 경우 청와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모두 FTA와 관련해 국내에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수 주일 내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유무역과 통상 증대를 통해 상호 경제 발전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록 결론은 나지 않았어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기술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 이날 한미 FTA 추가 협의를 완료되지 못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둘러싼 이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음. FTA 추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협상 의제로 추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당초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이 대통령도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추가 협의에서도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 정권 초기 적지 않은 국민의 반발로 인해 리더십의 약화를 야기했던 문제인데다 협상의 원칙 자체를 깨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상은 수 주내로 최종 합의하라고 지시했다는 FTA 추가 협의를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주목됨.
- FTA를 둘러싼 난기류에 반해 두 정상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를 놓고는 여전히 ‘찰떡궁합’을 과시했음.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전략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연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키로 했으며,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유지해온 긴밀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음.
- 특히 북한이 물적 증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한미 양국이 세계 각국과 함께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음.

#### ● 오바마 “한미FTA 협의 계속추진 필요 확인”(11/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계속 추진이 필요하고, 그것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양국 국민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양국 (협상)팀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 동안 노력해서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동안 한국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 한미 통상장관, FTA 완전합의 못해(11/11)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 오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해 막판절충에 나섰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문제는 이날 날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결심으로 극적 타결되거나 양측이 결렬을 선언하기보다는 FTA 쟁점의 조속한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이후에 계속 협의기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간 FTA 진행상황에 대해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면서 “일단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아야겠지만 오늘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가 타결되지 않더라도 결렬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쇠고기가 걸림돌이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FTA 협의과정에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로 절대 응할 수 없다”며 공식 의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반대해왔다.

#### ● 정부당국자 “쇠고기 절대 양보없다..원칙 확고”(11/10)

-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를 관련,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 FTA를 당장 안 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끊임없이 쇠고기 문제를 걸고 가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쇠고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갈등 없이 (협약 내용에)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절대로 한쪽에 끌려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쇠고기를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지금 쇠고기 문제를 보따리로 싸서 들고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예 보따리를 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FTA 협의와 관련한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은 정부 내에서 이미 확정돼 있다”며 “FTA를 안하면 안해도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자동차분야의 추가협의를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동차도 일방적으로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업계와 함께 우리 실익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얻는 게 없다고 (야당 등에서) 공격하는데 (협정문) 본문수정 없이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예컨대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후부터로 돼 있는 농수산물 관련 유예기간을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비준시점으로 늦추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한미 FTA, 타결 눈앞에 두고 ‘난기류’(11/10)

-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며 급진전됐던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논의가 10일 타결을 눈앞에 두고 때아닌 복병을 만나 난기류에 휩싸이며 난항을 겪고 있음.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간 3일째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합의내용 반영 형식,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 방안 등 잔여쟁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음.
- 양측은 오후에 다시 만나 협의에 나서기로 했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중 완전 타결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인 상황으로 반전됐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문제가 아무런 갈등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실제로 막바지인 3일째 회의에서 미국측은 협상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자료를 잔뜩 올려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한국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이상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아직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협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이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요구가 의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음. 이 관계자는 “한미 간 FTA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황은 더 유동적이 됐다”면서 “타결 쪽으로 급진전되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상황이 출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 ● 한미, FTA ‘완전 타결’ 임박한 듯(11/10)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3일째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중임.
- 양측은 지금까지 논의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는 등 사실상 타결에 가까운 진전을 이뤘지만 주요쟁점의 세부 내용, 합의 내용 반영 형식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한데다 양국 정상인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 중으로는 완전타결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음.
- 특히 이번에 양국간 FTA에 대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고, 차후에 FTA 문제를 꺼내 재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양측 모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양측은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접근을 확대키로 하고 한국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문제는 현행대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키로 ‘암묵적 빅딜’을 이뤘음.
- 또 양측은 FTA 발효와 관련, 한미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인 한.EU(유럽연합) FTA 이전 또는 적어도 비슷한 시기에 조기 발효토록 하는 게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 현재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60일 후 발효토록 된 내용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대쟁점 중 하나로, 미국측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선 한국이 국내 판매대수가 1만대 이하인 차량에 대해선 기준 적용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할 방침이지만 현재 차종별 연간 판매대수가 3천대도 안되는 미국산 자동차들은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 또 현재 연간 6천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연간 판매대수 1만대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한.EU(유럽연합) FTA에 명시된 대로 5%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음.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키로 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중임.
- 한국이 자동차와 관련한 미국측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도록 ‘빚장’을 풀어줘도 실제 시장이나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됨.

- 합의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협정문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속서나 양해서한에 세부내용을 명시하되 미국측이 요구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양국간 합의이행 감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조정하는 선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관측됨. 한미간 FTA문제가 완전타결될 경우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비준절차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 한미, FTA 협의 종료..사실상 타결된 듯(11/9)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9일 사실상 종료됐으며 양국 정부 최고수뇌부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FTA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양측이 협상대표 선에서는 일단 합의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최종 담판 성격의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가진 뒤 그동안 진행해온 FTA 협의를 마무리했음. 이어 양측은 최종 논의결과에 대한 백악관과 청와대 등 양국 최고핵심부의 최종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양측은 양국 수뇌부의 결정이 나는 대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임.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일정은 이날 오후 6시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음.
- 한미 양측이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현안 해결에 합의한 것은 한미 FTA가 세부 쟁점에 발목이 잡혀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한미 양측이 FTA 논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국내 비준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진전이 있을 경우 내년 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미국 의회는 의사일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FTA 이행 관련 법률안을 심의후 의결하게 됨. 이어 양측이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상대국에 통보하면 한미 FTA는 60일후에 발효되게 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정식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한국은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막았고, 자동차 관련 내용도 ‘일방적 양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규정하며 선방한 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앞서 체결한 한미 FTA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훼손된 ‘불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 김외교, 이노우에 미 상원 임시의장 면담(11/9)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니얼 이노우에 미 상원 임시의장 겸 세출위원장과 테드 코크란 상원 세출위 공화당 간사를 면담했음.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미 동맹 등 양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음.
- 이에 이노우에 임시의장은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하고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이노우에 임시의장은 지난 4일 열린 미국 중간선거에서 9선에 당선된 중진 의원으로 지난 7일 방한해 8일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했으며 9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함.
- 한편, 김 장관은 이에 앞서 한·미 FTA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피터 로스캠 미 공화당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FTA에 관한 미국 내 협조를 요청했음.
- 이에 로스캠 의원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 관한 우려가 미국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있다”면서 “지난 몇년간 양국간 쌓인 무역 이슈들을 재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음.

#### ● 김종훈 “한미, 쇠고기 아직 논의 안해”(11/8)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한 양국 통상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음.
-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며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그는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 같은 언급이 이번 협의에서 쇠고기 문제가 아예 배제된 것임을 의미하는지, 미국 측이 자동차 문제에 협의의 주안점을 뒀 쇠고기 문제는 순서상으로 나중에 미뤄 놓은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음.
- 이어 김 본부장은 자동차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연비,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우리(한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 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그는 “사실 이런 기준은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건전한 정책 방향이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이 자동차 안전·연비·온실가스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나. 한·중 관계

##### ● “李대통령, 후주석과 FTA, 한반도문제 논의”(11/9)

-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9일 전했다.
- 이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6일 서울에서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통신사가 보도했음.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G20 서울 정상회의 첫날인 11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임.
-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공동 목표”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미국, 유럽은 환율 문제에서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서울 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중국은 G20 시스템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나는 이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부터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이르기까지 한중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면 서 양국 관계의 미래에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다. 한·일 관계

##### ● 韓·日 정부, 日수탈 도서 1천205권 반환 합의(11/14)

-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14일 일본 요코하마(横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수탈)한 도서 1천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음.
-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음.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협정문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점이 걸림돌임. 중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는 큰 문제없이 협정문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대야소’인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비준에 다소 진통이 예상됨.
-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서반환 협정에 서명한 것을 평가했고, 간 총리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의 인도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이날 협정식에는 한국 반환에 합의된 일부 도서가 전시됐음.
- 양국 정상은 또 간 총리의 8.10 담화 후속 조치로 사할린 한인과 유골 봉환 문제 등이 착실히 진전되도록 노력키로 했음. 아울러 6자 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장이 돼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대북 문제에 있어 긴밀히 공조키로 했음.
- 이밖에 간 총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부품 소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 ● “日총리, 李대통령에 EPA 협상재개 제안”(11/12)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오는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의 재개를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EPA 협상은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중단됐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경제동반자협정 기본방침’을 통해 한일 EP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음.
-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 상호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을 요구했고, 일본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중단됐음.
- 간 총리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



계의 중요한 경제국이고 선진공업국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해가고 있다”면서 “일한 양국이 EPA 협정을 체결해 자유로운 물류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양국에 부과된 21세기의 사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그는 “향후 100년간의 일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양국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 EPA 협상을 조기에 재개해 타결함으로써 한층 강고한 일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한일 EPA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음.

#### ● 日 “한국 문화재 인도협정안 16일 국회 제출”(11/11)

- 일본 정부가 16일 일본 국회에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 약탈 도서 1천205책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협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이 11일 전했다.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관방부(副)장관이 11일 오전 중의원(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이 같이 밝혔음.
- 이 협정은 큰 문제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왕실에 관련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8일 외무장관 전화회담에서 일제가 한반도에서 약탈해 간 일본 궁내청에 보관해둔 도서 1천205책을 한국에 돌려준다는데 합의했음.

#### ● 日 12일 각의서 도서반환 협정 확정(11/9)

- 일본 정부가 12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에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반환하기로 한 협정안을 공식 확정함. 9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12일 각의에서 도서 양도에 관한 협정안을 결정한뒤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도서 양도 협정(조약)에 서명함.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도서 반환과 관련 “14일의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할 것이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양국의 협정문 서명이 완료되는대로 이를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임.
- 일본 정부가 다음달 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현재 한일 양국간 모색되고 있는 12월의 이명박 대통령 방일때 도서 반환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임.

#### ●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11/9)

- 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음. 이는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이 신문은 일본이 방위 기밀을 포함한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뿐으로 이번 움직임은 한일 간 안전보장협력이 본격화하는 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접촉에서 교환을 상정한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 이 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도 지난달 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를 포함한 안보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음.
- 이 신문은 “한국은 수년전부터 북한의 비상사태를 우려해 일본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 “미국의 승인하에 군사 훈련에 관한 전략과 무기의 정보교환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음. 일본과 한국이 안전보장협력을 활발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은 불안정한 북한 정세에 대한 위기감 때문임.
- 아사히신문은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감이 있고, 한일 간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온도차가 있는 등 과제도 많다”고 전했다.

### ● 日외상 “임시국회서 도서인도협정 처리 추진”(11/8)

-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8일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반환을 위한 협정(조약)을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도서 반환과 관련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가능한한 이번 임시국회에 협정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확정된 뒤 이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다시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를 경유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함.
- 일본 정부는 자민당 등 야권을 최대한 설득해 조기에 국회비준을 종료한다는 입장임. 일본 정부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한국 도서 인도를 위한 조약을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마에하라 외상은 도서 ‘인도’의 대상과 관련 “최대한 조사해서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피디하게 (한국과) 합의했다는 것은 양국의 향후 (외교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합의를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 ● <한국도서 반환 日국회 신속처리 불투명>(11/8)

- 일본 정부가 8일 우리 정부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천205책을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지만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8월 10일 한·일 강제 병합 100년 담화에서 약속한 만큼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익단체와 언론, 우익성향인 자민당 등 야권은 문화재 반환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반환은 일본 측이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개인청구권 문제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다 일본의 박물관 등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에도 불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8월의 간 총리 담화 직후 “문화재 반환이 여러 가지 개인 보상문제 등으로 불뚱이 될 수 있어 화근을 남겼다”고 불만스러워했음. 자민당 내에서는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 보관 도서의 반환과 관련해 “황실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졸속처리는 안된다.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이 때문에 당초 일본 정부는 연내 도서 반환을 위해 현재 개최 중인 임시국회에서 한·일 도서양도 협정안(조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 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해 정기국회인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정부는 한국이 추가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외무상이었던 지난 8월 24일 민주당 정책조사회의 외교무문 회의에 출석해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도서 외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 오카다 외상은 간 총리가 담화에서 밝힌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과 관련 “이번 한 차례로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했고 조선총독부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돼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 외의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이미 결착이 끝났다”고 못박았음.
- 일본 정부는 하지만 돌려주기로 한 도서는 최대한 성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지난달 22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기에 협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국에 도서를 인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간 총리도 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성의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빠른 시기에 인도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자민당 등 야권을 적극 설득해서 도서 ‘인도’를 위한 조약안의 국회 비준을 조기에 받는다는 입장임.

- 하지만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 과정에서 간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어 국회 비준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 日, 조선왕실의궤 포함 1천205책 반환(11/8)

-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천205책을 돌려주기로 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대신은 8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 양국 장관은 협정문안에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도서 1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음.
-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일본 궁내청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서는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 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과 제실도서는 반환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민간에 소장된 문화재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인도’가 아니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주장, 결국 양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음.

#### 라. 미·중 관계

##### ● < G20 > 中매체, 미중정상회담 차분하게 보도(11/11)

- 중국 언론매체들은 자국내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차분하게 보도했음. 이들 매체는 위안화 환율 절상문제와 달러의 양적 완화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미중 양국이 관계강화를 더 증진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2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미중 회담



에서 “양국 우호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뿐더러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양자대화와 협력, 상대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고 있으며, 핵 비확산과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차이나데일리는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후 주석의 방미일정과 관련, 후 주석이 초청에 감사한다고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방미를 고대한다는 화답을 전하는 등 화기애애한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전하는데 주력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미중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서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세계 금융위기이후 조성된 복잡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면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음. 중국신문사는 그러면서 후 주석이 위안화 환율절상 요구와 관련해 유연한 체제를 향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중국의 방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미국에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최근 미국의 달러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도 이와 비슷한 톤으로 미중 정상회담으로 보도했음. 이들 매체는 그러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려면 중국이 위안화 재평가를 가속해야 하며 경제 펀더멘털에 상응해 위안화 환율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후 주석을 강하게 압박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음.
- 중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경제부양을 위해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해 그로인해 중국 시장에 달러자본 유입이 커져 큰 피해를 보게 되자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을 겨냥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면서 공격했음.
-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에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소비자물가지수(CPI) 4.4% 상승을 발표하고 관영 매체들은 이를 계기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와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집중 보도한 점을 상기시키고, 이런 모든 제스처가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비한 공세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 ● <관심모은 美中-韓中 정상회담..G2 컨센서스 주목>(11/11)

-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양국이 그동안 불편함을 털고 관계개선에 나설지 주목됨. 최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대 강대국(G2)으로 부상함에 따라 두 정상의 만남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가장



주목받는 양자회동으로 꼽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난 수년 동안 더 강고해졌다”며 “후 주석과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도 “미국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해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관계개선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양국이 그동안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세웠던 대립각을 누그러뜨리는데 긍정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임. 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고 최근에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음.
-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도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구도를 약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았음. 특히 후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에서 “중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외교소식통은 “G20 정상회의 기간의 연쇄적인 양자회담을 통해 6자 회담 참가국들간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 미국과 중국간 쌓인 앙금을 털고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오바마, 후진타오에 환율 압박(11/11)

- 지구촌 환율 논쟁의 양축이 돼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양자회담을 열고 환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7번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회담의 상당 부분이” 환율 문제에 할애됐다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약 80분 동안 진행된 이 회담에서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 재평가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후 주석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대통령이 환율 문제를 먼저 제기했으며 중국이 환율 결정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미 재무차관이 밝혔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환율 유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위안화 절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응수한 것으로 브레이너드 차관은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과 같이 북한과 관계를 맺은 국가들이 남한



에 대한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정상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더욱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도 논의했다고 제프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했으며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음.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국이 지도적인 핵강국으로서 핵확산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으며 지도적인 경제국으로서 강력하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데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후 주석도 “미국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자신의 미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 <中, 美의 대중 봉쇄정책 여부에 촉각>(11/11)

-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음. 최근 부쩍 잦아진 미 행정부 수뇌부의 아시아 행보가 중국 봉쇄 의도에서 이뤄지는 것일 수 있다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7개국 순방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일부국가 동행,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방문 등이 명분은 대(對) 아시아외교 강화라지만 속내는 결국 중국 봉쇄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임.
- 중국내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위상은 추락하는 반면 중국은 급상승하는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열세를 ‘만회’하기위해 안보.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 올들어 미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압박과 대만에의 첨단무기 판매, 서해로의 미 항모 진입시도 등이 단순한 돌발 사건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공세로 보고 있는 것임.
- 중국은 특히 난사(南沙)와 시사(西沙)군도를 둘러싼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과의 이른바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중국-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갈등 등의 아시아 지역의 외교.안보 문제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하고 있음.
-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클린턴 장관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며 본격적인 개입을 선언했고 댜오위다오는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이라며 중국을 겨냥하는 분위기가 역력함. 이어 클린턴 장관이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한 아시아 7개국 순방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게이츠 국방장관 역시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아 국가들과 적극적인 안보협력 행보를 보이자 중국의 의심이 더욱 커졌음.

- 사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저우융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수뇌부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아시아 지역과 중동·유럽 순방에 나선 것도 미국의 중국 봉쇄에 대한 돌파 시도라는 지적도 나옴. 이들 수뇌부는 순방외교에서 경제협력 카드와 더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토 및 해양 주권문제에 지지를 당부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목할 대목은 중국내에서 국방부장보다 더 높은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정치국원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쉬차이허우(徐才厚)가 시리아 등의 중동국가를 순방하며 안보협력 강화에 나선 점임. 사실 시리아가 미국을 적성국으로 여기는 점을 감안하면 쉬 부주석의 이런 행보는 미국 압박용이라는 지적임.

#### ● 美, 서해 항모파견 방침 재확인(11/10)

-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에 미 항공모함을 파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음. 미 국방부가 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시 미 항공모함을 서해에 파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항해 자유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자리에 동석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도 “이들 해역은 공해로, 중국의 소유도 한국의 소유도 아니다”면서 “우리과 많은 국가가 공해에서 항해해 왔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中왕치산, 美양적완화 간접 거론(11/9)

-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다시 불편한 감정을 비쳤음. 왕 부총리는 9일 베이징(北京)에서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가진 경제대화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의 대거 유입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음.
- 이는 미국이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 영향이 개도국의 자본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 그의 이런 지적은 11~12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를 주요 의제화하려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왕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며 “국제 금융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으로 시장 신뢰



성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중국-영국 경제대화에서 왕 부총리는 최근 개도국으로의 자본 대거 유입의 구체적인 원인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중국 관리들은 미국을 겨냥해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을 전해졌음.

#### ● 中, 美의 양적완화 조치 재차 우려(11/8)

- 중국 정부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에 재차 우려를 표시했음. 중국 정부는 8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류진민(劉振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 이샤오쥘(易小準) 상무부 부부장, 진중샤(金中夏) 중국인민은행 국제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음.
- 중국 정부의 이런 제스처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와 일본 요코하마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브리핑에서 류진민 외교부 부장조리는 두 회의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음.
- 주광야오 부부장은 미국이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총 6천억 달러(약 66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기로 한데 대해 “이는 세계 금융시장 안정성에, 특히 신흥국 자본시장에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음.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그런 거시정책이 미 경제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주요 기축국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그는 이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절상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계 경제회복이 여전히 완만하며 장기발전 차원에서 주요 20개국 간의 정책협조와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피해갔음. 이들은 관심사인 G20 서울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하지 않았음.

#### 마. 미·일 관계

##### ● 오바마 “美日동맹 亞太 평화·안정의 토대”(11/13)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그는 또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며 미일 동맹 관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토대라고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과 간 총리는 이날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요코하마에서 약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TPP 협회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의 토대”라고 강조하고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향후 동맹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양국 정상은 센카쿠열도(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동맹관계를 심화하지는 않는데 견해를 함께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방위한다는 결의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모델 국가로 미국으로서의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 총리가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 두 나라 정상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고위 실무자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 간 총리는 일본이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국의 존재, 미군 주둔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관련, “제2의 개국을 한다는 결단으로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 바. 미·러 관계

### ● 러 외무 “美, START 연내 비준 희망”(11/12)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미국 의회에서 올해 안에 비준돼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폐막일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이 양국 간 무기감축협정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미 의회에서 협정에 반대하는 야당이 설득되기를 희망한다. 미국 국내 정치 환경이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조속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이 협정에 서명했다. 1991년 발효돼 지난해 12월 만료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하는 새 협정은 현재 2천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천500기로,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은 1천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미국에서 이 협정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당



- 초 계획했던 연내 비준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라브로프 장관은 또 이날 “러시아는 공동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관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협력은 평등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평등한 협력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이 같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평등하다는 기초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 그의 이번 발언은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진행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임.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지난 3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 측이 제안한 공동 MD 시스템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러시아와 나토 간의 동등한 MD 시스템 건설을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모스크바의 주요 일간지 ‘니자비시마야 가제타’는 12일 나토 관계자를 인용, “나토가 러시아에 공동 MD 시스템 참여 대가로 일부 미국 군사위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나토는 러시아가 MD에 참여할 경우 미사일과 다른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미국 군사 위성이 촬영한 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위성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 사. 중·일 관계

### ● 中日 전격 정상회담..갈등 해소 모색(11/13)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오후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충돌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정상회담을 열고 갈등 해소를 모색했음.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9월7일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면서 영토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개최된 요코하마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전략적 호혜관계의 촉진과 경제 협력, 민간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교도통신은 간 총리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일본과 중국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정상회담이 불투명했으나 일본 정부는 오후 5시가 넘어 5시20분께부터 간 총리와 후 주석이 공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일본 측의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22분 정도 진행됐음.
- 간 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으로 “후진타오 주석의 APEC 참석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한다”고 말했고, 후 주석은 “초대에 감사한다. 이번



회의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 회의가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화답했음.

- 하지만 회담 시간이 너무 짧아 갈등해소를 위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협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회담을 시작하는 양국 정상의 표정은 굳어 있었음. 회담이 끝난 뒤 협의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음.

#### ● 中 “다오위다오 영상, 중일관계 간섭 원치않아”(11/11)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1일 일본에서 ‘센카쿠 비디오’ 유출자 색출 문제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소위 비디오 문제가 중일관계를 계속 간섭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홍 대변인은 앞서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근해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장면이 담긴 ‘센카쿠 비디오’가 막 유출됐을 때 “비디오는 일본 측 행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는 강한 어조의 논평을 냈었음.

#### ● 日 ‘센카쿠 비디오’ 유포 공무원 조사 논란(11/10)

- 일본 정부가 이른바 ‘센카쿠 비디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해상보안청 직원을 조사하자 일본 내 비난 여론이 들끓었음. 도쿄 경시청은 10일 비밀 준수 의무를 어긴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베(神戸) 해상보안부 소속의 주임 항해사(43)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체포·구속할 것으로 예상됨.
-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9월7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는 장면을 찍은 일본 측 동영상(‘센카쿠 비디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음. 일본 정부는 국민감정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동영상을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퍼져 나가자 유포자를 찾겠다며 검.경에 수사를 지시했음.
- 주임 항해사는 경찰 조사 전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이 영상을 볼 권리가 있다”고 유포 동기를 설명했고, 10일 오전 9시께 자신이 탑승하는 순시선 선장에게 “내가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 여론은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인 선장을 조기 석방하고, 동영상을 비공개한 것을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 야당 의원들은 임시국회에서 “처음부터 동영상을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고 공세를 벌였고, 시민들은 10일 해상보안청에 “범인 찾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화와 이메일을 300여 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밤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직후에는 일본 시민 수백명이 해상보안청



에 격려 전화를 걸었음.

#### 아. 일·러 관계

##### ● 日-러시아 정상회담, 영토문제 논의(11/13)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상회담을 열고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책을 논의했음.
- 간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상호 신뢰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의 신뢰 관계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일본의 반대에도 쿠릴열도의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를 방문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의 입장과 감정상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음. 그는 또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최종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싶다”면서 “향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간 총리에게 “내년 적절한 때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고, 간 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음.
- 정상회담에 앞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상은 회담을 열고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다는데 견해를 함께 했음. 마에하라 외상은 “일본과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다”면서 “현안인 영토와 경제발전 문제를 해결해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음.

##### ● 러-日, APEC 회의 기간에 정상회담(11/12)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3~14일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크렘린 공보실이 12일 밝혔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나탈리야 티마코바 크렘린 공보실장은 이날 “요코하마 APEC 회의 기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간 총리의 회담이 계획돼 있다”며 “현재 정확한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말했음.
- 티마코바 실장은 “정상들은 양국 관계 발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본 측은 이런 회담에서 전통적으로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이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일정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일본으로 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한편 일본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12일로 예정됐던 러시아와의 경제의정서 서명을 거부키로 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히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상은 이날 중의원의 한 위원회 회의에서 “북방영토 문제는 일본에 아주 중요하며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은 일본인의 북방영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유린했다”고 지적하고 러측과의 경제의정서 서명 거부 입장을 밝혔다.
- 러·일 양측은 당초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투자포럼에서 교역 및 투자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의정서를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자. 기 타

##### ● <李대통령 “극동시베리아 개발 적극 참여”>(11/10)

-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10일 정상 회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임. 양국 정상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통상·자원·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안정 방안 등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 특히 두 정상이 공동회견에서 극동 시베리아 공동 개발과 같은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함에 따라 향후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이 대통령은 “한국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사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과정에서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양국은) 전망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합의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현대 기술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회견에서 “양국 기업들이 서로 접촉하고 여러가지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업, 이런 협력을 꼭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또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환



을 분쟁 해결, 신흥국 개발 행동계획 마련과 같은 주요 의제의 합의 도출에 러시아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같은 해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음.

-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러 민관산학 협의체인 '대화 포럼' 폐막식에 참석하고, 만찬을 함께 하며 양국 우의를 다졌음.
-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 또는 다른 국가 간에는 견해차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이전)는 거의 없습니다"라면서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갖고 G20에도 임하고 있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간의 교역량은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간의 교역량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크다"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음.

#### ● 메드베데프 "한-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희망"(11/10)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 주최로 흥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우리는 앞으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 관계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교역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며 "양국간 교역과 한-러시아간 투자가 많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오늘까지 형성된 양국간 교역 구조는 시장의 움직임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며 "한국으로 가는 러시아 수출의 3분의2는 석유와 가스인데, 앞으로 이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 "러시아가 한국 기업인들이 러시아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상대방에게 배워나가는 소위 '현대화 동맹'을 구축할 의향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응용 기술 분야에서 좋은 경험이 있고, 러시아는 기초과학에서 성과가 많다"고 말했음.
- 그는 "에너지 효율성과 의학, 컴퓨터, 핵, 우주기술 등에서 양국간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특별한 관세와 이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한국의 최첨단 기업이 이런 혜택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